

<감사원 자산취득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월	11월	12월	
2015년	금액	110	145	541	29	63	445
	집행률	9%	11%	43%	2%	5%	31%
2016년	금액	181	532	439	12	38	690
	집행률	9%	27%	23%	1%	2%	36%
2017년	금액	146	230	114	410	251	567
	집행률	7%	11%	6%	20%	12%	27%
2018년	금액	103	309	460	38	262	441
	집행률	5%	15%	22%	2%	12%	21%
2019년	금액	214	99	114(7월)	-	-	-
	집행률	7%	3%	3%	-	-	-

※ 16년 12월 36%, 17년 4분기 60%, 2019년 7월 현재 미집행률 87%

“국가 예산감독 기관이 이래서야”

감사원, 예산 30% 연말 무더기 집행

3년간 12월 집행액 총 14억 중 13억
올 예산 7월까지 집행액 13% 불과

국가기관 예산 집행을 감독하는 감사원이 예산 30%를 연말에 무더기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감사원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6년 12월 1년 예산의 36%를, 2017년 4분기에는 1년 예산의 60%를 몰아 썼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집행한 예산은 전체 중 13%에 불과했다. 올해도 연말 무더기 예산집행이 이뤄질 것이라 전망이다.

감사원은 자산취득비 대부분을 전산운영 정보화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역으로는 컴퓨터 같

은 사무기기와 소프트웨어 구입에 주로 사용했다. 2015년부터 3년간 12월에 집행한 총액 14억원 중 13억원을 12월 20일 이후 몰아 썼다.

현행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 관서가 예산을 사용할 때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채 의원은 “집행률이 낮으면 내년 예산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말 부랴 부랴 남은 예산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감사원이 지침을 위반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라며 “다른 기관을 감사하기 전에 감사원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檢, 부정선거·경제 사건만 수사

‘전문공보관’ 도입키로

검찰이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최소 한도로 절제하고, 별도의 ‘전문공보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4번째 내놓은 자체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10일 “종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빈도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대검은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사회 발전속도와 추세에 부합하도록 검찰권 행사 방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혁안은 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파악된다. 조 장관은 신속 추진과제로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과건 최소화를 실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의 4번째 개혁안은 법무부 개혁안과 방향이 대체로 같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 검찰 안팎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겠다는”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로 국민 인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계획도 나왔다. 현재 수사담당자들이 담당하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을 뒤 전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피의사실 공표와 포토라인 문제와 관련해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 조화를 이룰 방안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보안이 강화되고 국민 알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관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와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손현경 기자

창업비용 절감... 쇼핑몰운영자와 비슷

100세 시대 5060 신중년이 된다

직업탐색 가이드

⑤ 오픈마켓 판매자

옥션·G마켓 등 중개형 사이트서 개인·소규모 판매업체 상용거래

50대 이상 판매자 매년 2배 증가 마케팅·유통 경력자 도전 바람직

◆온라인으로 상품 판매

인터넷 쇼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옥션이나 G마켓과 같은 중개형 사이트에서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 하는 오픈마켓(open market)을 들 수 있다. 즉, 오픈마켓은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자적 가상시장으로,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중간유통마진을 생략할 수 있어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회사는 판매자에게 시스템을 제공하는 대가로 상품을 등록한 사용자에게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다. 때문에 우수한 판매자가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오픈마켓판매자는 이러한 오픈마켓에서 판매품목을 설정해 실제

#.정년퇴직 후 창업을 계획했던 A씨는 임대료 등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오프라인 창업을 포기하고 온라인 창업을 알아보기로 했다. 오픈마켓 운영 회사를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니 생각보다 쉽게 창업을 할 수 있었다. 창업아이템은 3D프린터로 제작하는 성인용 피규어, 50세가 넘는 나이에도 자칭 ‘키덜트족’으로 불릴 길 원했던 그는 늘 젊은이들 못지않은 감각으로 피규어를 제작해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오프라인 창업이라도 창업이라는 부담이 커서 갈등도 했지만, 오랜 시간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이었기에 다행히 단기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온라인 영업과 유통을 하는 판매자를 말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기존에 잘 알려진 직업인 ‘온라인 쇼핑몰운영자’와 하는 일은 거의 유사하다”며 “판매가 이뤄지는 장소가 오픈마켓이나, 실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50대 판매자 수 증가 추세

오프라인 창업에 비해 초기 자본금이 적다는 점에서 50대 이상 판매자의 수가 크게 늘었다. 한 오픈마켓 사이트의 경우는 50대 이상의 판매자가 매년 2배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중장년층 판매자들이 선택하는 품목은 누구나 취급하기 쉬운 의류나 잡화 등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 경쟁에서 밀려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편이다. 때문에 품목의 다양성과 경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결국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에서는 장점이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한 품목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말 그대로 오픈

마켓이기 때문에 경쟁에도 무한정 오픈되어 있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판매 수익을 높이기 위해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고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등 치열한 경쟁이 단점이 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 뿐 아니라 품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판매 및 영업, 마케팅, 유통 등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분들이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픈마켓 운영 사이트에서도 우수한 판매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매자를 교육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우리나라 대표 오픈마켓에서는 거의 판매자 교육센터를 운영한다. 이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비교적 쉽게 창업이 가능 하다. 이외에도 창업스쿨,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원 등에서도 오픈마켓판매자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온라인 교육이나 무료 교육을 쉽게 접해볼 수 있다. /손현경 기자 son89@



국민제안 듣는 조국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법무부

“원칙없는 세금 車 개소세 폐지를”

자동차 한 대에 부과하는 세금이 11가지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대안정치연대 대표 유성엽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차 한 대를 구입해 운영할 경우 내는 세금의 종류는 크게 자동차세·개소세 등이 있다.

일반 승용차와 캠핑용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륜자동차에 일괄 부과하는 개소세의 경우 당초 부과 목적이 사치성 재화의 소비를 막고자 하는 것이지만, 현행 차량 출고가의 3.5%가량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개소세 수입은 약 1조원에 이른다. 자동차가 1000만대를 넘어서 필수재가 된지 오래지만, 단순 세원 확보를 목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석대성 기자

공직자 횡령 미수금 103억 회수 못하나

횡령미수금 소멸시효 내년 시행
내년 1.5억, 2021년 101.6억 만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 직원 2명이 100억원 넘는 돈을 횡령해 처벌 받았지만, 횡령 미수금의 소멸시효가 내년부터 시작돼 자칫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10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속 직원 2명이 횡령한 돈은 총 108억 6000만원이다. 지난 2006년 5월 동남본부 행정지원팀 회계를 담당하던 박모씨는 2008년 3월까지 총 38차례에 걸쳐 창원클러스터 운영자금 5억4000만원을 횡령했다. 박씨는 같은 해 9월 적발돼 파면되고 법정 구속됐다.

2008년 5월에는 본사 행정지원실 회계 담당 배모씨가 같은 해 12월까지 산

단 보상비를 차명계좌 70개를 개설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103억2000만원을 횡령했다. 이듬해 7월 적발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횡령한 108억원 가운데 회수한 돈은 5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03억원은 회수하지 못한 실정이다.

횡령 미수금 103억원의 소멸시효는 내년부터 시작한다. 박씨 횡령 사건에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1억5000만원은 채권시효가 내년 5월 4일 만료한다. 배씨가 횡령한 돈 중 돌려받지 못한 101억6000만원의 소멸시효는 이듬해인 2021년 6월 22일이다.

산단공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통해 두 사람의 재산을 조회했지만, 재산이 없다는 답변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석대성 기자